

지난 50년 한국경제발전의 평가와 향후발전 전략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의 과제-

2008. 5.

좌 승 희

목 차

- I. 경제 발전정책의 쟁점들
- II. 복잡계 경제의 특징
- III. 완전경쟁모형의 문제점
- IV. 신고전파 성장론의 문제점
- V. 복잡계 경제발전관
- VI. 경제발전의 실제
- VII. 현대 세계 경제발전사 개관
-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
- IX.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전략
- X. 국민성공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

I. 경제 발전정책의 쟁점들

1. A. Smith의 두 가지 경제문제

- 1) 주어진 부(재화)의 배분문제:가격기구/보이지 않은 손→신고전파 완전경쟁모형→경제학의 과학화
- 2) 새로운 부의 창출문제:분업,전문화,Dexterity→생산성향상: 미해결의 장

2.경제발전정책의 쟁점들

- 1) 자유무역 對 보호무역정책(산업정책/유치산업보호정책)
→Smith vs. List
- 2) 시장(자율) 對 정부(개입)의 역할 / 시장실패 對 정부실패
→Hayek, Friedman vs. Keynes
- 3) 시장 對 조직/기업의 역할 (Hayek의 관점은?)
- 4)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 5) 자유의 이념 對 평등의 이념
- 6) 불균형성장 對 균형성장/경제력 집중과 집적 對 분산
- 7) 성장 對 분배(복지)

3. 모든 주장, 주의들을 관통하는 경제발전의 일반론은 불가능한 꿈인가?

II. 복잡계 경제의 특징

1. 부분 부분이 합하여 부분과는 전혀 다른 거시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창발현상
→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질서 창출
2. 복잡계는 항상 동태적 불균형상태에 있다. → 닫힌 계와 열린 계의 차이는?
3. 복잡계의 새로운 질서 창출과정은 진화법칙을 따른다. → 생물진화와 문화진화의 차이는? / 진화실패가능성은 없는가? → 정부의 역할은 ?
4. 복잡계의 진화는 집중과 집적을 가져온다.
5. 복잡계에서는 이웃과의 만남이 중요하며, 보다 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

III. 완전경쟁모형의 문제점

1. 동일한 경제주체: 집중과 집적을 수용하지 못함:진화와 복잡계 변화 원리와 상충, 사회주의와 평등의 이념과 상통
2. Atomistic competition:실질적인 상호작용(경쟁과 협력)이 없는 경제. 경제주체 간 Network 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각자 가격만을 쳐다보는 경제→Closed system/no nonlinear interaction (no synergy):열린 복잡계 원리와 상충.
3. 완전정보:거래비용이 없는 경제, 기업(조직)이 필요 없는 경제/ 제도가 없는 진공경제, institution-free economy:거래비용경제학과 제도경제학과 상충
4. 균형(Equilibrium)→Closed system속의 Entropy가 극대화된 상태:영원한 휴식과 죽음:열린 복잡계 원리와 상충

IV. 신고전파 성장론의 문제점

1. 동어반복/회계학 수준의 성장론: 자본축적도 노동 생산성도 모두 내생변수, 수출도 투자도 모두 내생변수 → 내생변수에 의해 내생변수 설명. → $Y=F(K,L)$
2. 외생적 충격에 의해서만 성장이 촉발: 외생적 기술 혁신이 성장촉발 → $Y/L=f(K/L:T)$
3. 내생적 성장론:
 - Lucas, $Y=f(K, hN)$, h : 개인인적자본 축적기간;
Romer, $Y=K(AN)$, A : 사회적 총지적자본; N : 인구
→ Spill-over effects 혹은 외부효과에 의한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내생적 성장동인
 - 시장실패를 통해 성장 → 완전경쟁모형을 파괴해야
성장가능?/기술혁신, 교육, R&D가 그냥 성장을 가져오나?/incentive는 어디서 오나?

V. 복잡계의 진화와 발전 (1)

가. 진화의 원리

- 모든 복잡계(complexity) 변화의 기본원리(Eric Beinhocker, 2006): Differentiation → Selection → Replication(Amplification) : Endogenous process
- Random, unconscious, unintentional process of change
- 진화는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퇴보를 가져오기도 함.

나. 문화진화의 실패가능성: 정(正)의 거래비용 하에서는 진화실패 발생

- 시장거래의 본질적 특성때문에 아이디어의 무단복제를 막을 방법이 부재 →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자의 불이익이 발생 → 혁신을 통한 변화의 역동성은 정체
- 경제발전과 낙후는 왜 생기는가? 진화실패 현상과 관계?
- 불완전한 내생적 진화과정을 교정할 제3의 외생적 차별자가 필요?

V. 복잡계의 진화와 발전 (2)

다. 발전의 원리: 방향과 목적의식을 갖는 진화과정 (졸저, 2006)

- ❑ Conscious, intentional process of change/개선, 진보, 향상을 가져오는 변화만이 발전
- ❑ “외생적 차별자(Exogenous Discriminator, arbiter) 를 가정
- ❑ 내생적 진화(Endogenous Evolution)와 외생적 선택(Exogenous Discrimination/Selection)의 결합이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 ❑ 외생적 선택: 내생적 변화 중에서 발전 친화적 변화를 선택하는 과정/경제적 차별화(Economic Discrimination)
- ❑ 발전의 알고리즘=진화 알고리즘+차별화 알고리즘

라. 차별(다름, 차이, 차등)이 없이는 변화도 발전도 없다.

→ 진화와 발전의 기본 알고리즘:하늘(하느님, 신, 환경, 세력계티 초원의 맹수, 사회, 시장, 제도, 조직/기업, 정부)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마. 차별화 발전원리: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졸저, 신국부론)

VI. 경제발전의 실제(1)

1. 경제발전이란 서로 만남을 통해 서로간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다.
 - 발전은 nonlinear interaction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과정 → 발전은 열린 불균형계의 “새로운 질서”의 창발현상
 - 그래서 발전은 시너지 창출원을 양산하는 과정이다.
 - 혁신하여 흥하고 성공하는 사람, 기업, 지역, 대학들이 경제사회의 역할 모델로서 시너지 창출원 역할을 한다.
 - 모든 발전하는 경제사회에는 항상 앞서가는 일류 혁신가들이 많다.
 - 이러한 성공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발전이 빨라진다.

VI. 경제발전의 실제(2)

2. 왜 발전은 집중과 집적을 가져오나?

- ❑ 복잡계 경제의 변화는 “차별, 선택, 복제(증폭)”의 과정을 밟는다. => 적자(適者)(The fittest)의 선택과 양산 과정이 발전 과정이다. → “차별화 원리”
- ❑ 발전의 원천인 시너지는 서로 다른 주체들의 만남을 통해 창출된다.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더 앞서가게 되고 더더욱 좋은 파트너를 만날 기회는 높아진다.
- ❑ 발전은 성공하는 주체에게 더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안겨주는 과정이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
- ❑ 발전은 차등과 차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승자와 패자가 차별화되는 과정이다.
-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은 바로 적자생존의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이다.

VI. 경제발전의 실제(3-1)

3. 시장만의 힘으로 발전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 시장의 기능: **시장은 차별화의 장이다.**

- 1) 시장은 오직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주체만을 대우한다.
- 2) 소비자, 주주, 채권자, 근로자, 기업 등 시장의 모든 주체는 서로간에 차별자의 역할을 수행→오직 성공하는 주체만을 선호
- 3)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 하이에크의 정보처리 및 경제 조정기능, 전통적인 가격의 발견 기능 등 시장의 그 어떠한 아름다운 기능도 궁극적으로 차별화 과정 없이 실현될 수는 없음.

VI. 경제발전의 실제(3-2)

- 시장은 항상 스스로 돕는 성공하는 경제주체만을 우대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동기 부여자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적자(適者)를 골라내는 차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시장거래는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많은 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발전의 원천인 “시너지”는 시장거래에 적합하도록 그 양과 질을 표준화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지 못한다. 시너지는 일종의 자유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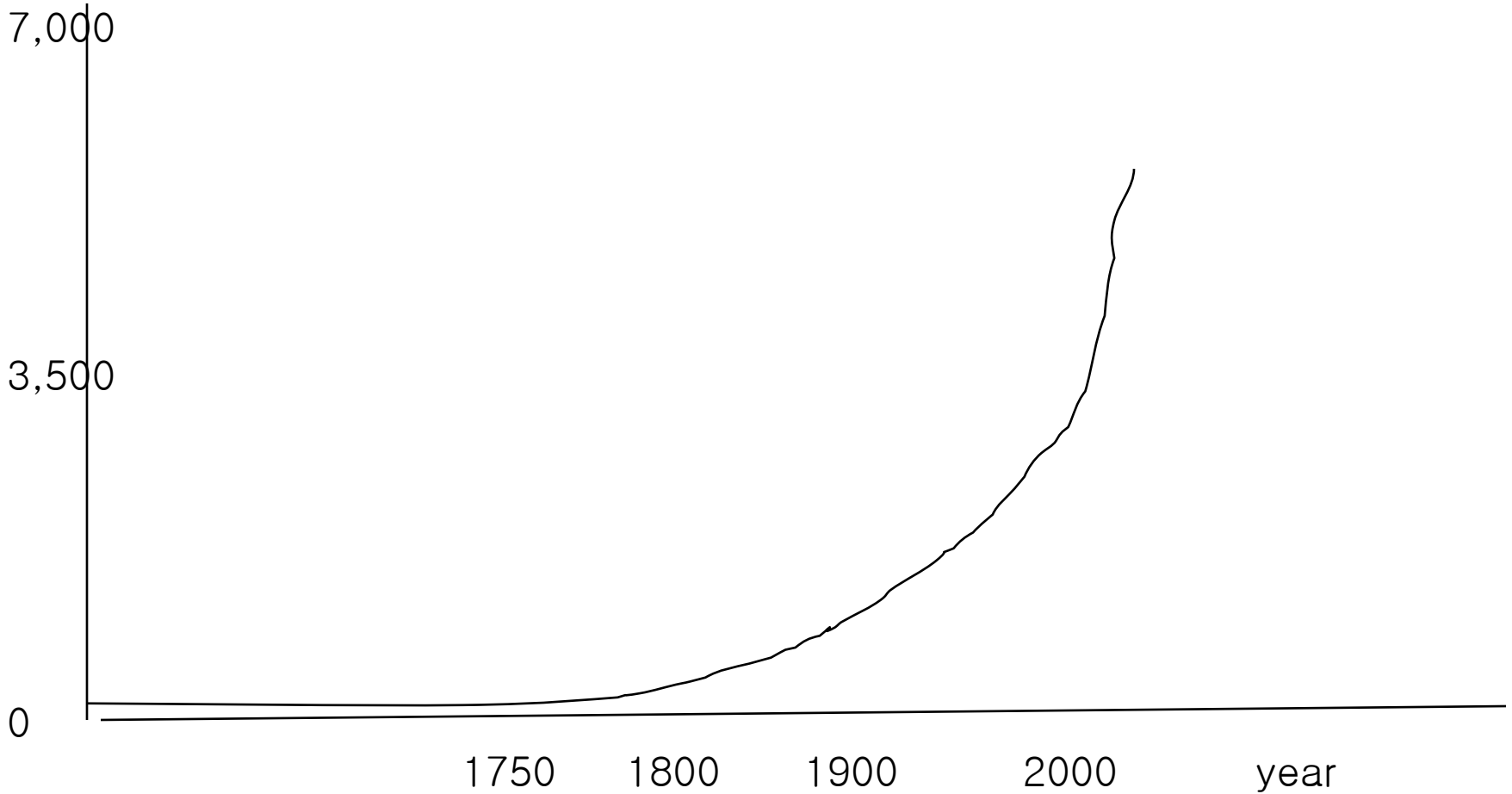
VI. 경제발전의 실제(3-3)

- 거래비용 때문에 발전의 시너지 창출원들인 사회의 역할 모델들(혁신가, 발명가, 성공하는 일류 스타들...)은 그 사회적 기여에 비해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즉 시너지를 향유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내기가 어렵다.
- 그래서 시장만의 힘으로는 시너지 창출원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없다(시장의 실패). 발전의 원천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다.
- 시장실패는 거래비용 때문에 생기는 차별화 기능의 약화현상이다.

VI. 경제발전의 실제(3-4)

□ 2백 50만년의 세계경제발전역사 (source: Eric Beinhocker, the Origin of Wealth, 2006,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세계일인당 소득(1990년 달러)



VI. 경제발전의 실제(3-5)

- ❖ 왜 인류는 2백50만년의 경제생활 중 거의 2백4십9만9천 8백년을 거지처럼 살았나? 자생적 시장질서는 어디에 갔었나?
- ❖ 왜 세종대왕 같은 슈퍼스타는 체계적으로 등장하지 않는가?
- ❖ 왜 한국에서는 세계일류 학자들이 잘 생기지 않는가? 일류 경제학자는 ?
- ❖ 일류를 양산하는 발전메카니즘은 고 거래비용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시장실패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발전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Market failure is ubiquitous.

VI. 경제발전의 실제(4-1)

4. 기업이라는 조직 없이는 발전은 불가능하다.
기업내부거래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 기업은 수직적 명령조직으로서 기업내부거래는 모두 사장(CEO)의 명령에 의해 이루지기 때문에 협상도 합의도 불필요하다. →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내부거래는 시장거래에 비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된다.
- 기업은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서로간에 시너지창출을 극대화하도록 명령(유도)하는 장치이다. → 시너지창출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냄으로써 발전을 이끈다. → 시장실패를 고쳐낸다.
- 특히 현대식 유한책임회사가 인류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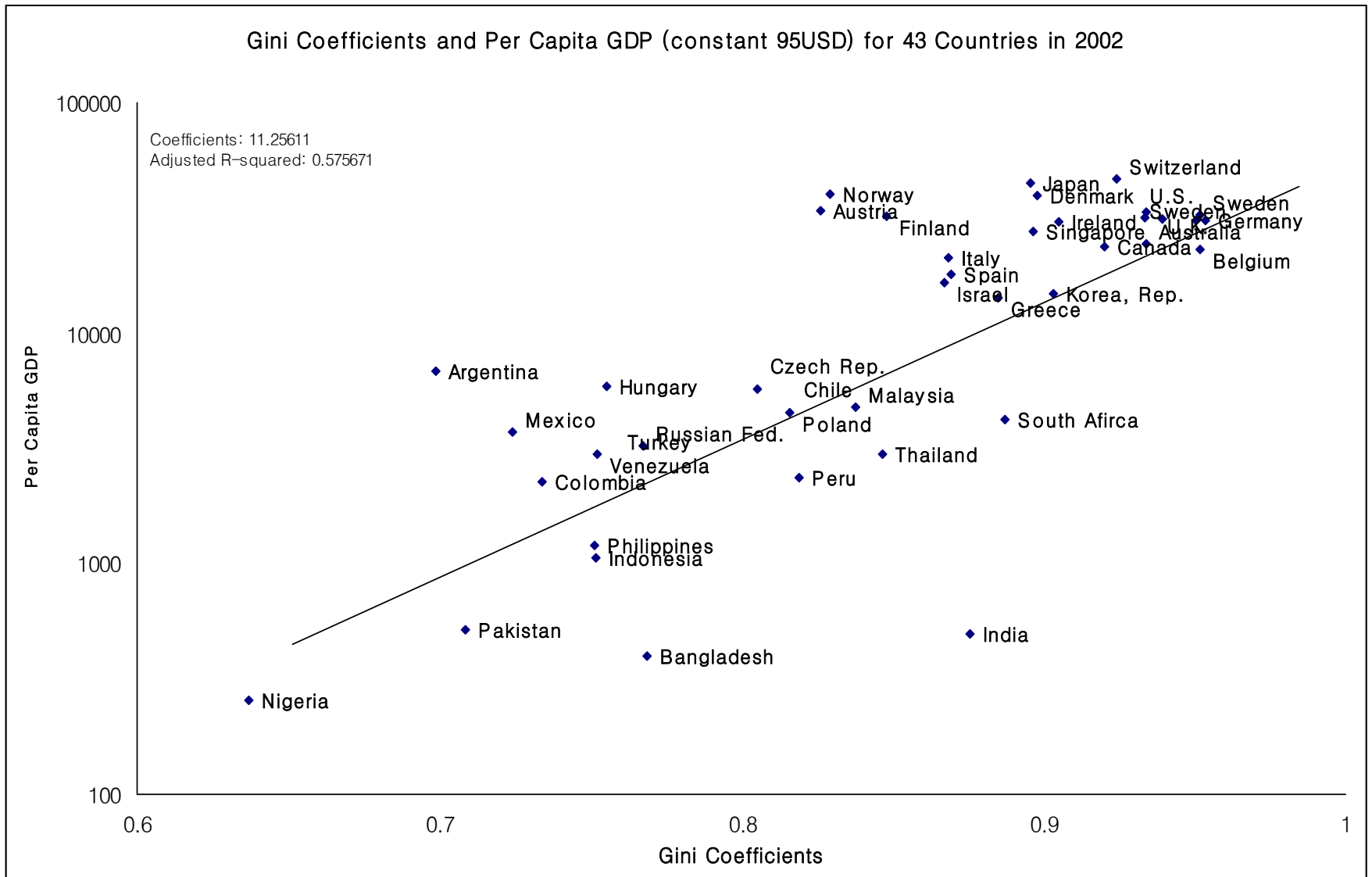
VI. 경제발전의 실제(4-2)

- 18세기 후반이후에 나타난 경제발전의 시기와 18세기 말부터 본격 등장하고 1844년과 1862년 영국에서 “기업법”에 의해 공식화된 유한책임회사 조직인 현대적 기업의 등장시기가 일치한다.
- 1825-1862년 사이에 영국에서 기업법이 시도됨.
- 현대적 기업조직은 경제사회제도적 혁신 사례이다. → 과학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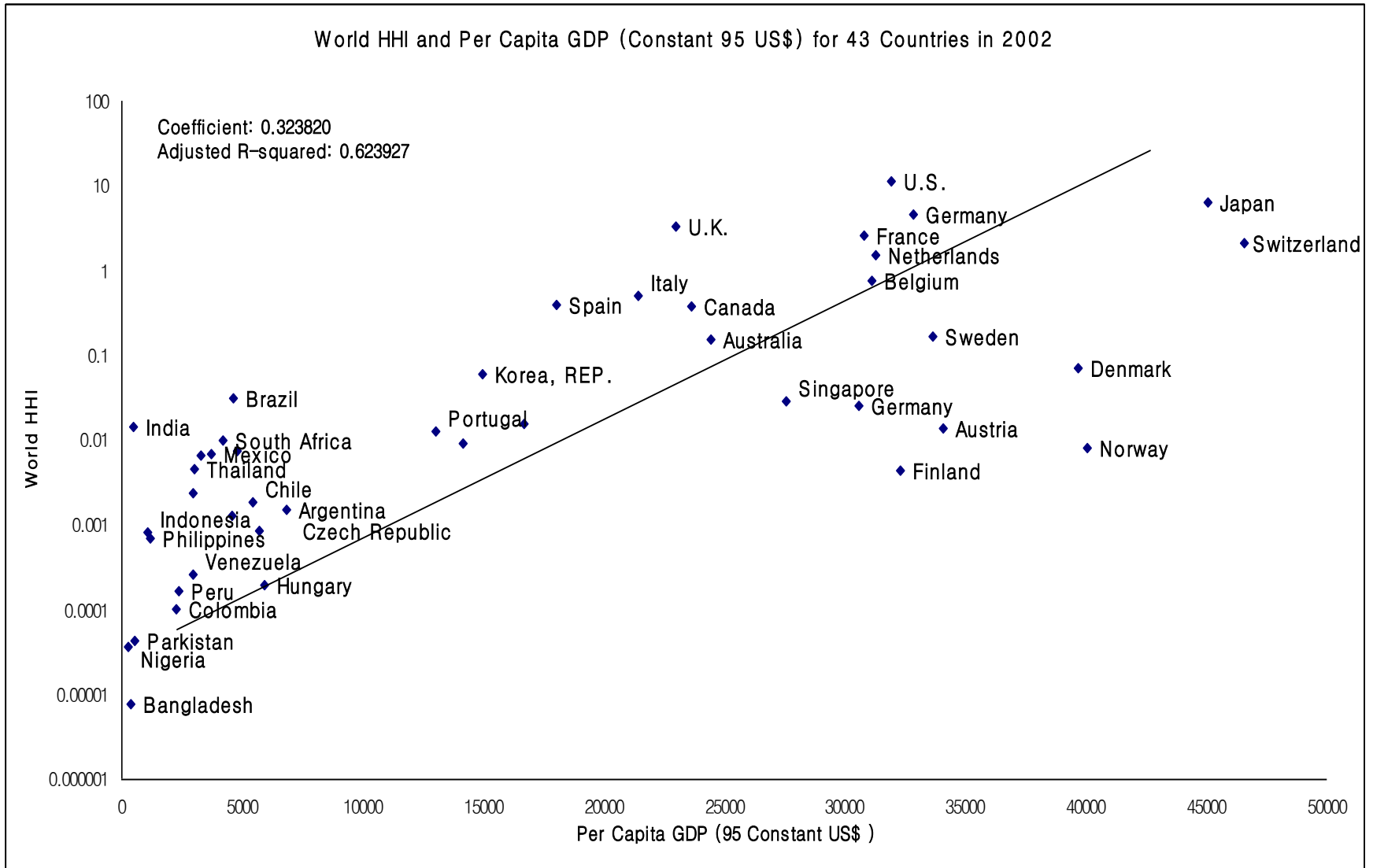
VI. 경제발전의 실제(4-3)

-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직후 기업법을 영국에서 도입하여 명치유신을 이끈 대기업들을 만들어 내었다.(물론 이들 기업들이 일본군국주의를 이끌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
- 한국의 경제발전도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들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 듀바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역동적인 경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일류기업들이 몰려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 →일류 기업 없이 선진 경제는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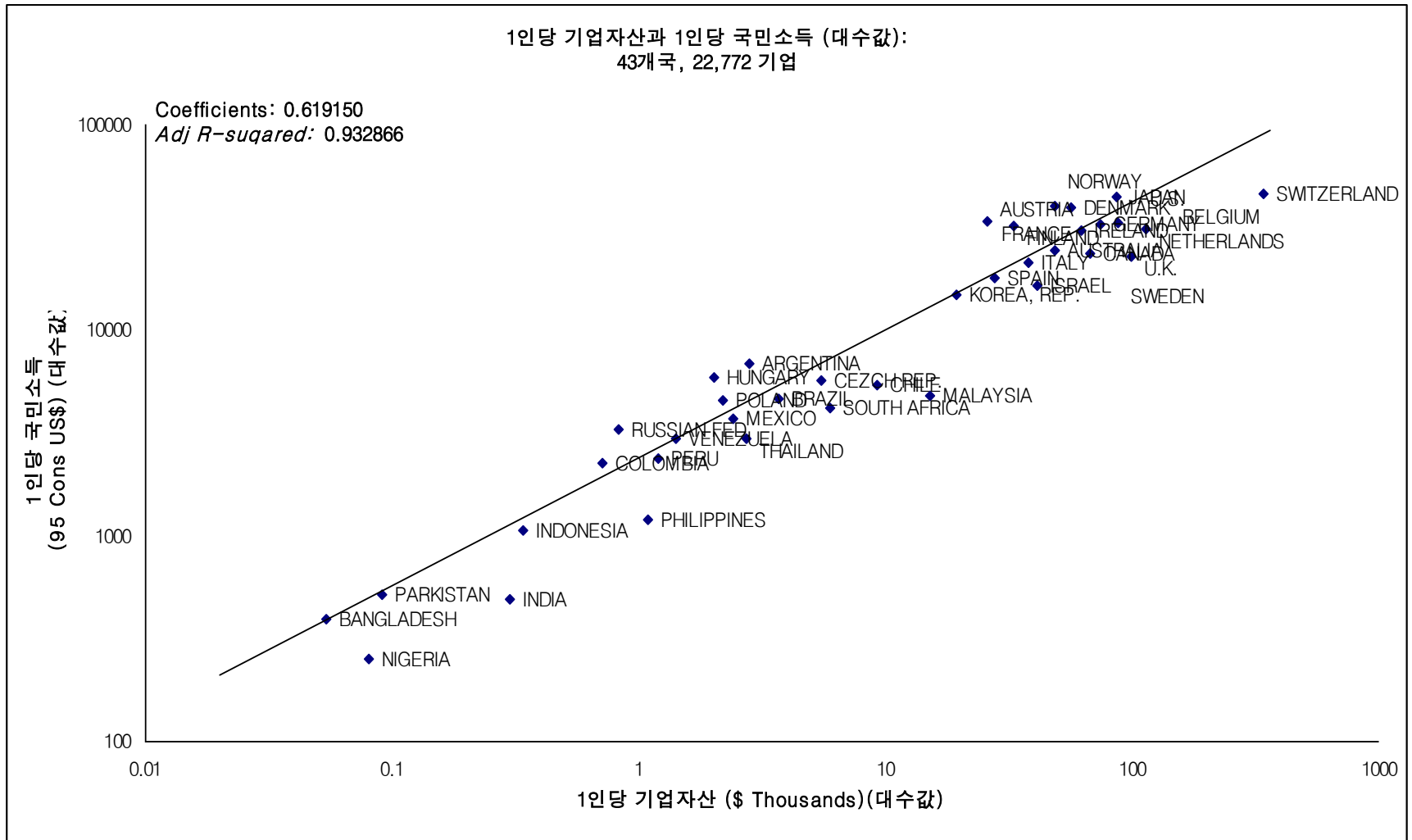
<각국 상장기업자산 분포의 불평등도(Gini coefficient)와 1인당 GDP(95년 불변 US\$ 가격)(2002년 43개국)>



< 각국 상장기업의 세계시장 자산집중도(World HHI)와 1인당 GDP(95년 불변 US\$ 가격, 2002년 43개국) >



<1인당 기업자산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43개국, 22,772 기업)>



VI. 경제발전의 실제(5)

5. 정부라는 조직도 시너지창출원인 성공하는 역할 모델들을 도움으로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산해냄으로써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6. 국가리더의 경제적 역할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대함으로써 국민들을 성공의 대열에 나서도록 동기부여 하는데 있다.
 - 대통령은 국민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기업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업을 가릴 줄 알아야 하며, 전자를 우대할 줄 알아야 한다.

VI. 경제발전의 실제(6-1)

7. 시장경제는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다. 이들 3자의 차별화원리 실천이 경제적 도약의 필요 조건이다.

- 기업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발전을 시발할 수 있지만 기업 생태계 또한 시장실패현상에 노출된다. 잘하는 성공기업은 시너지 창출원으로서 그 대가를 충분히 못 누린다. →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롤 모델의 underpaid 현상이 발생한다. → **사회실패 (진화실패)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 정부의 사회실패현상에 대한 치유노력, 즉 차별화원리의 실천이 필요하다.
- 성공하는 주체들을 우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내어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함. → 국민경제내의 유인체계를 성공하는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혹은 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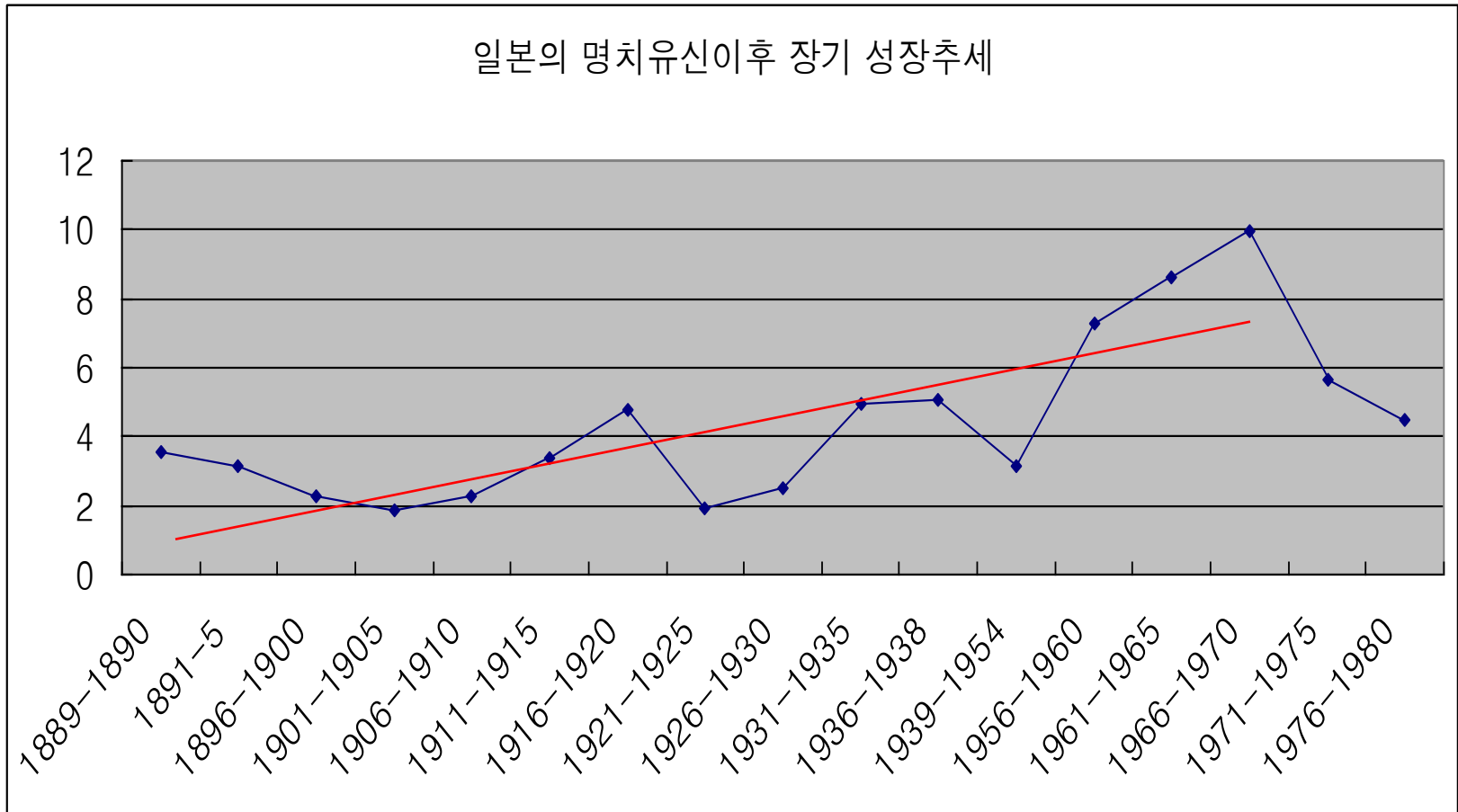
VI. 경제발전의 실제(6-2)

- ❖ 차별화는 prisoners' dilemma game의 cooperative solution을 찾아내는 전략임: 협조자(시너지 창출원)를 더 우대함으로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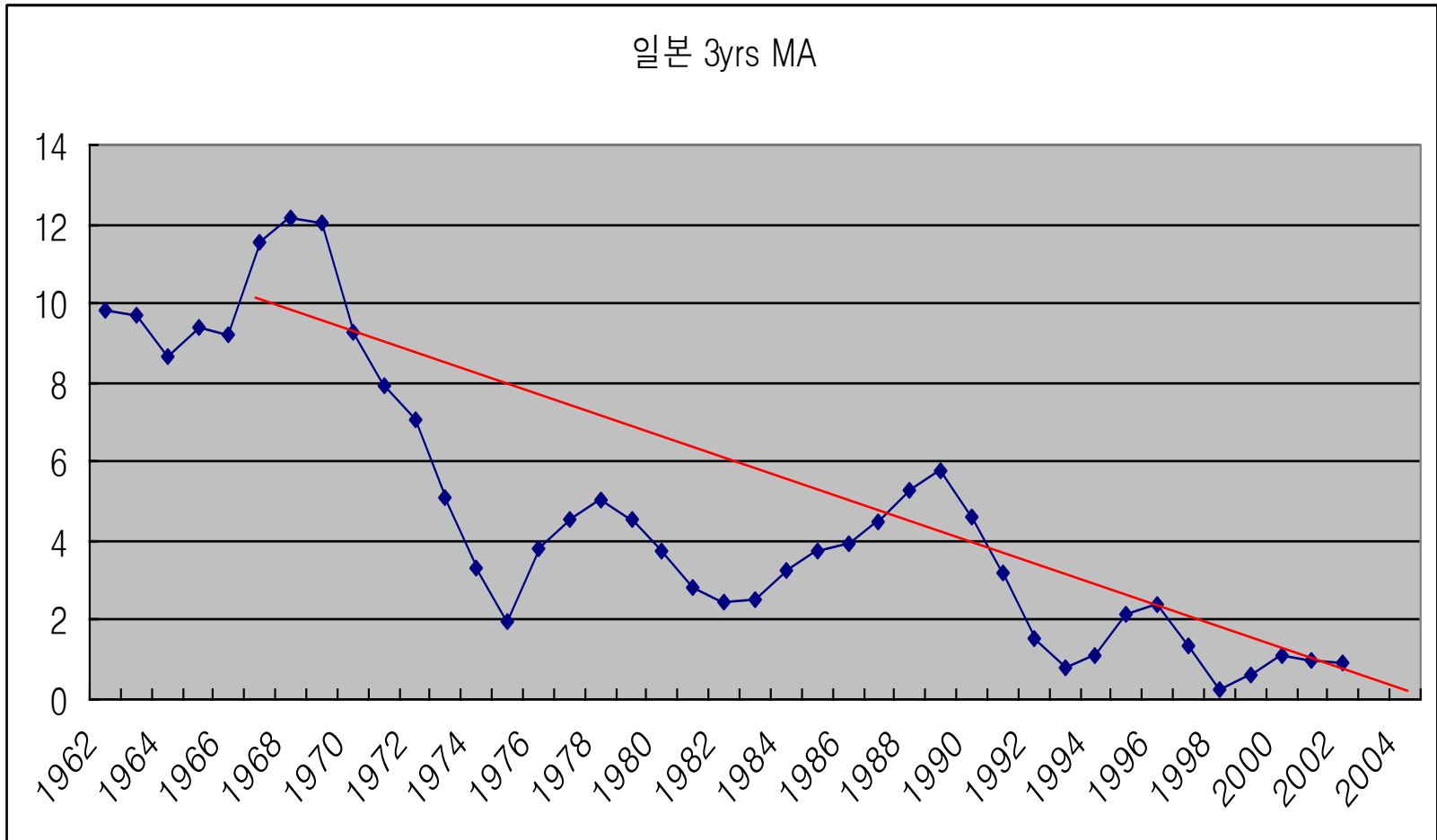
VII. 현대 세계 경제발전 사 개관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아르헨티나
- 중국
- 터키
-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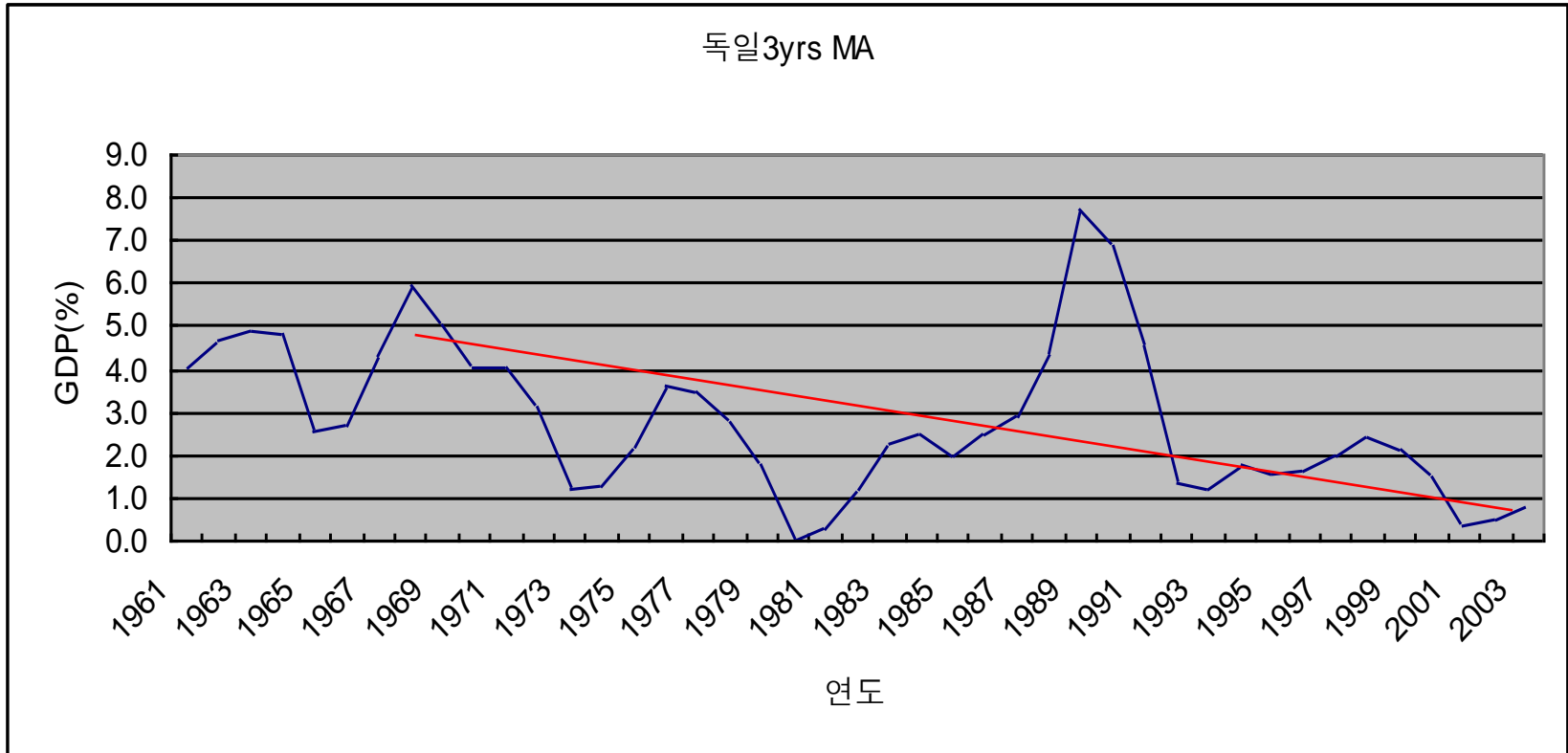
일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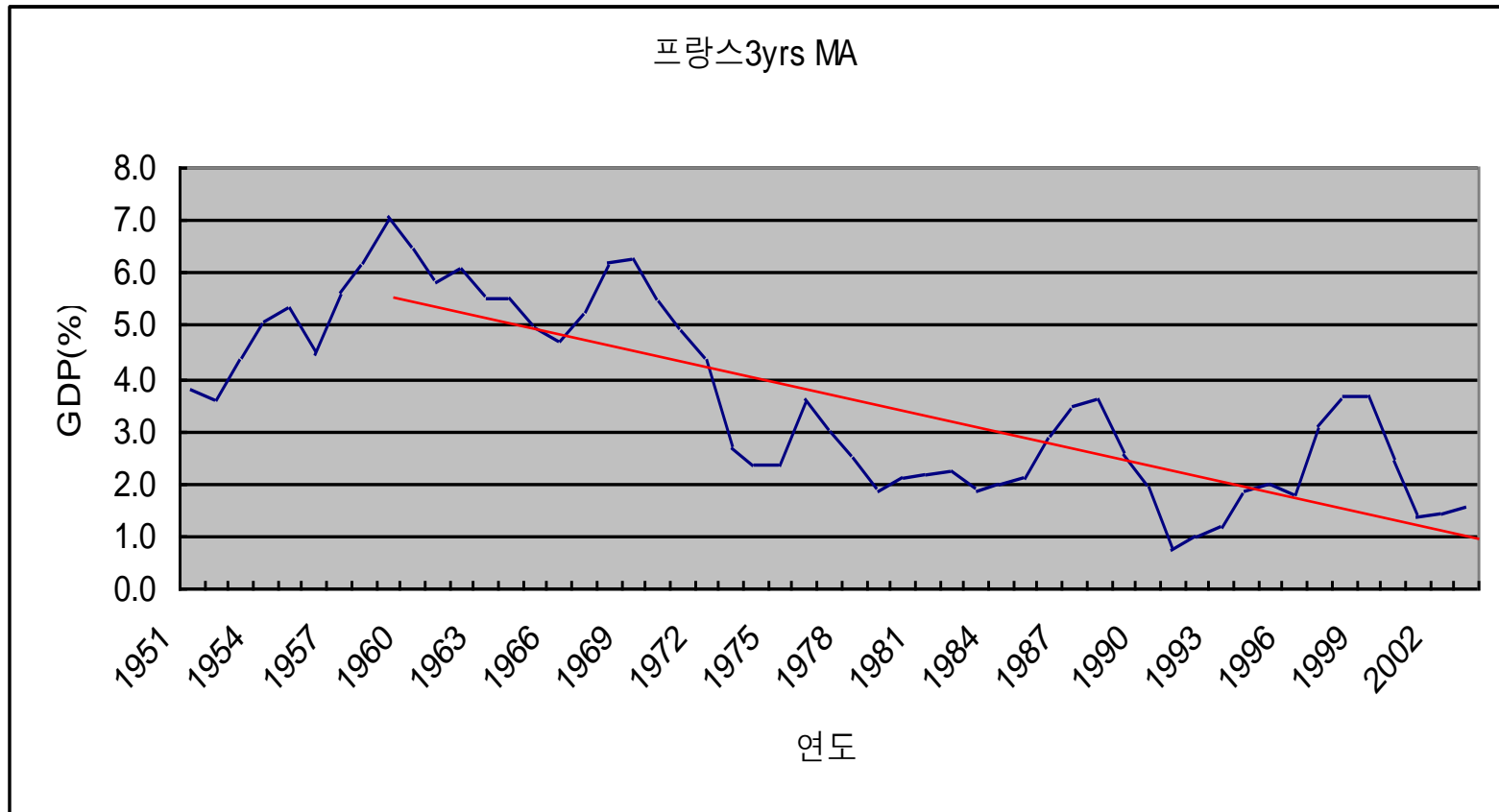
일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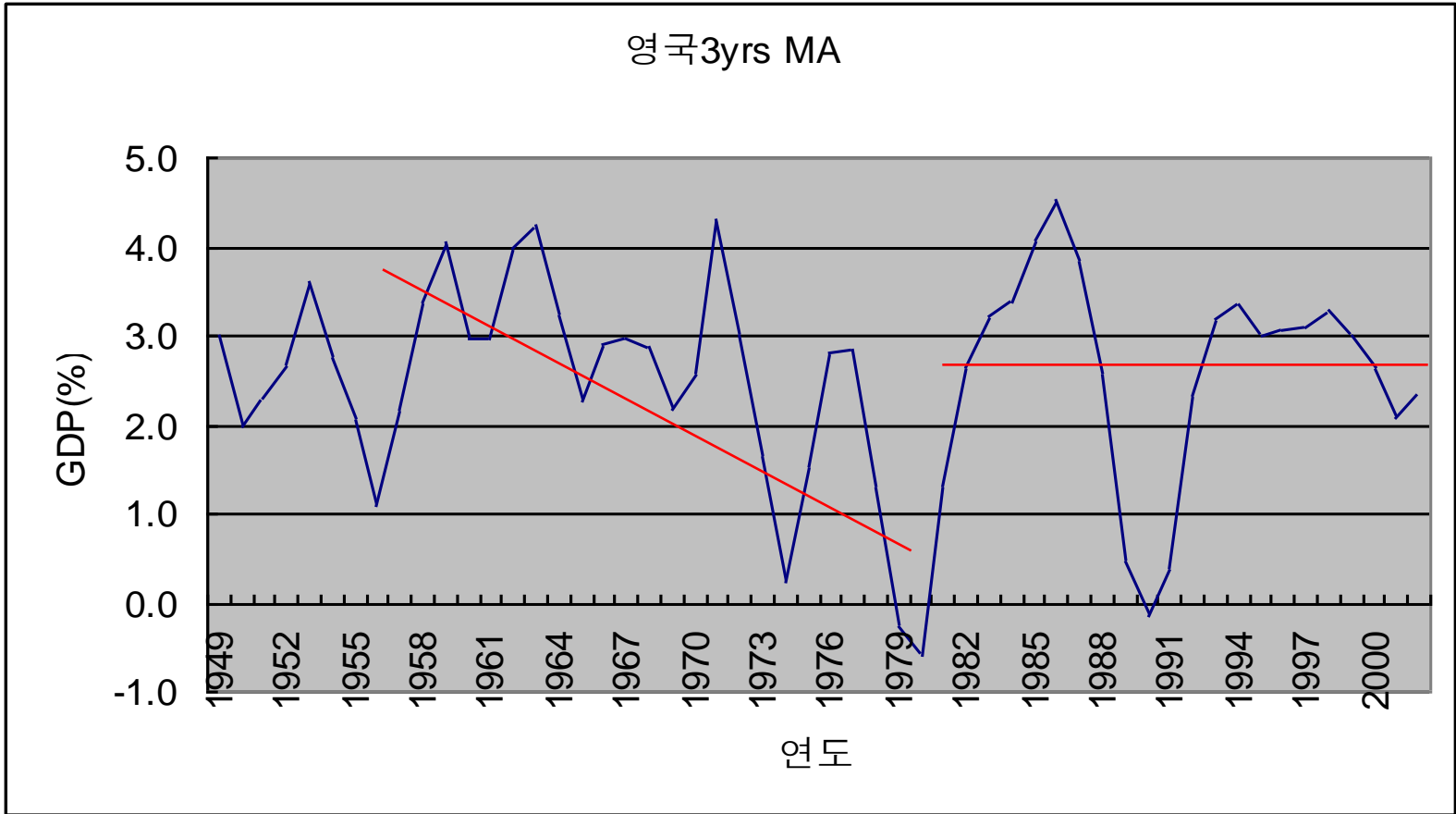
국 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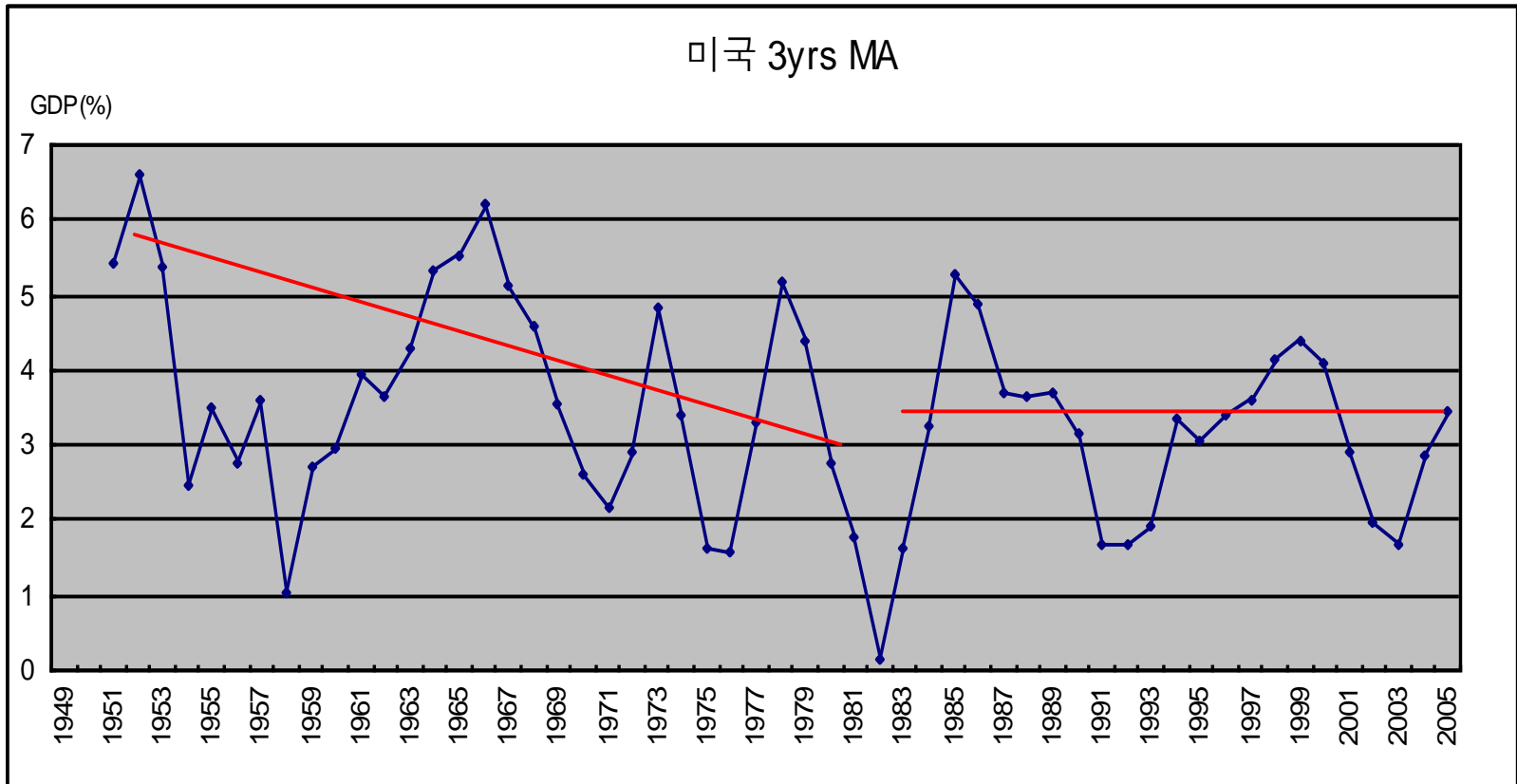
프랑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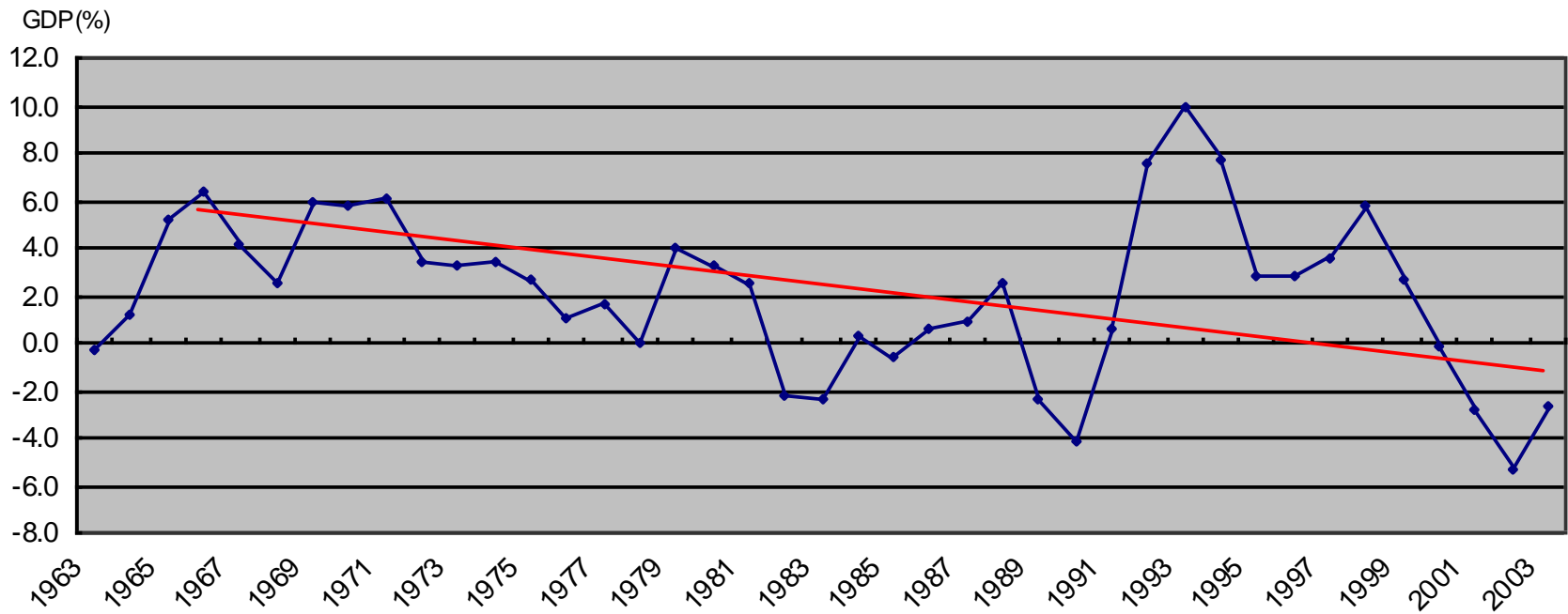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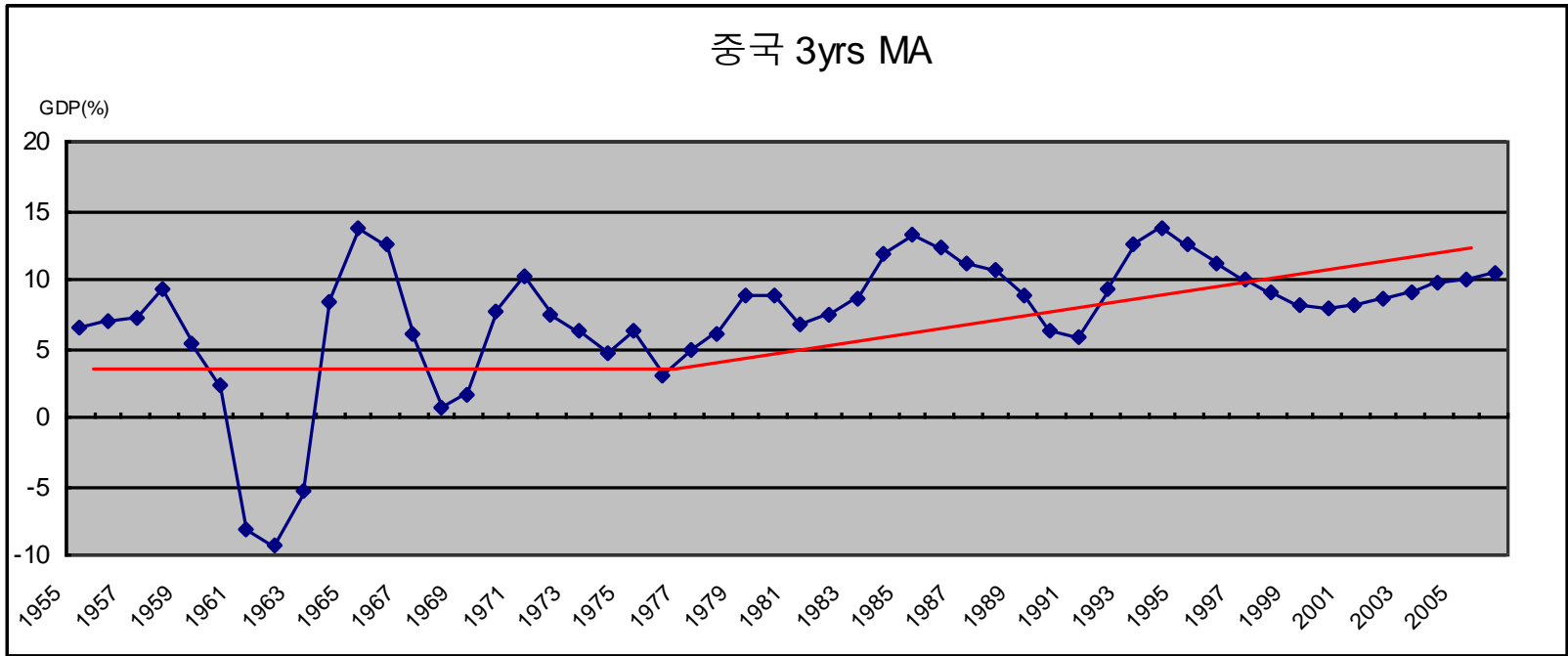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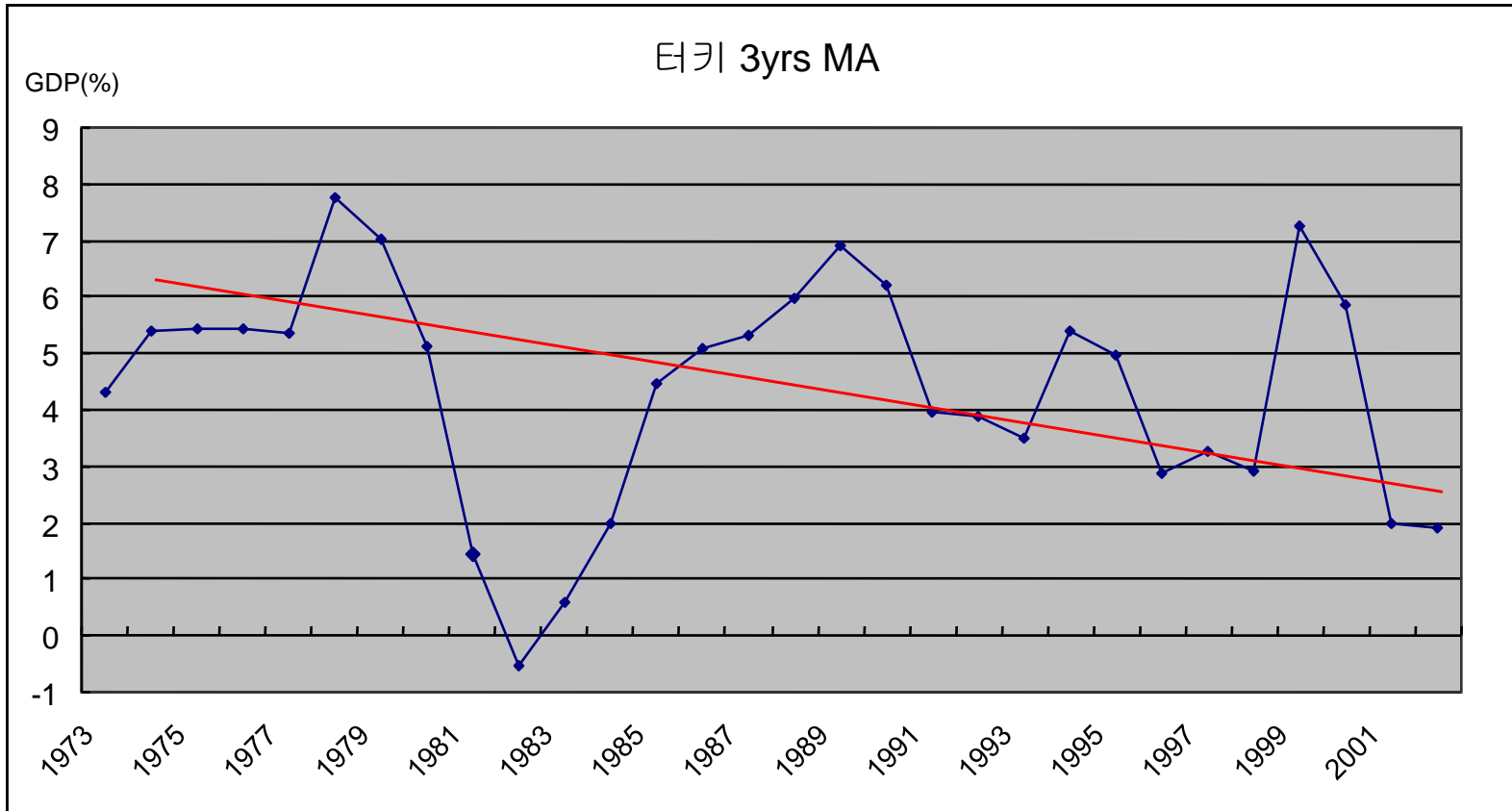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3yrs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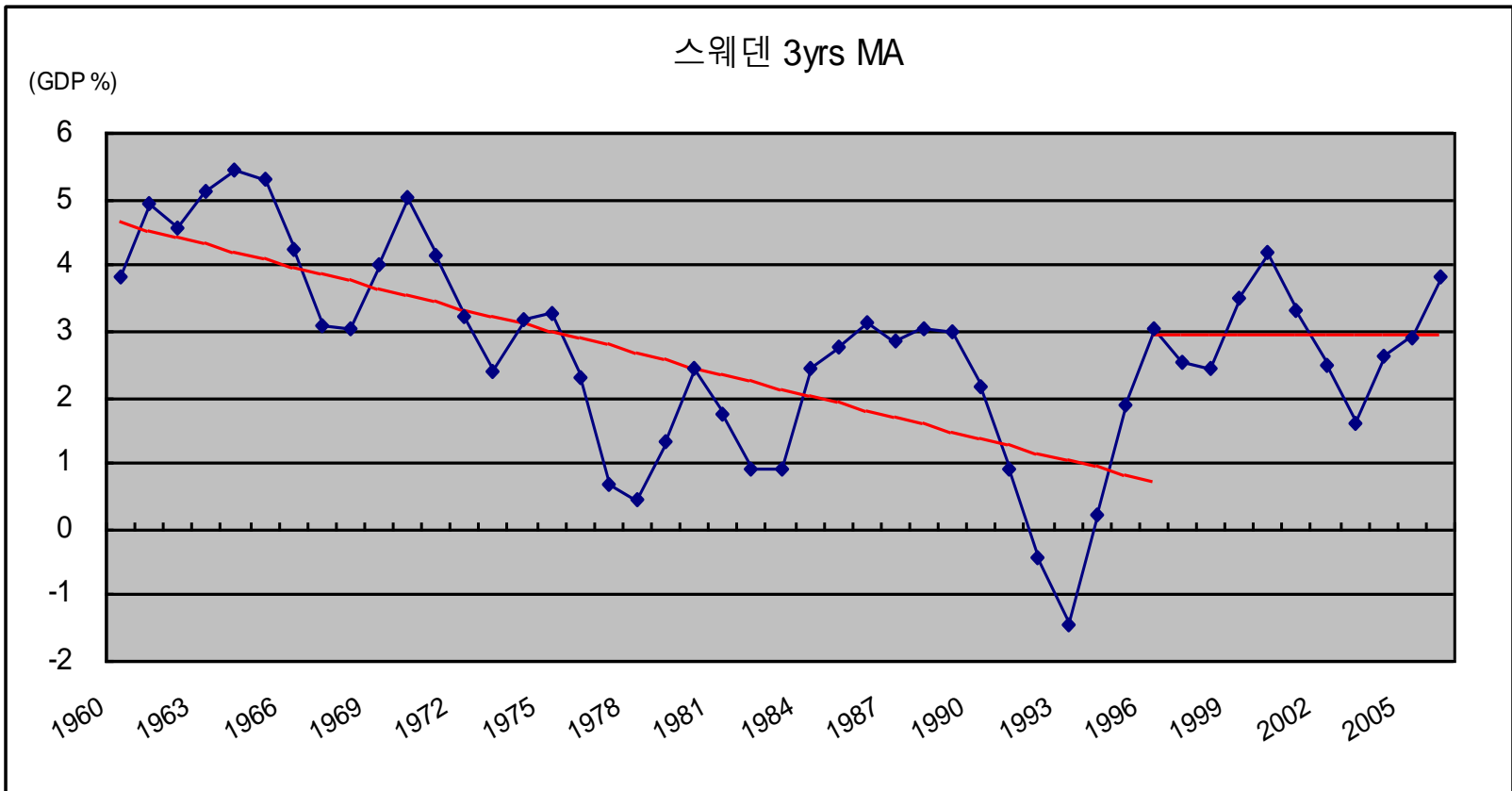




터키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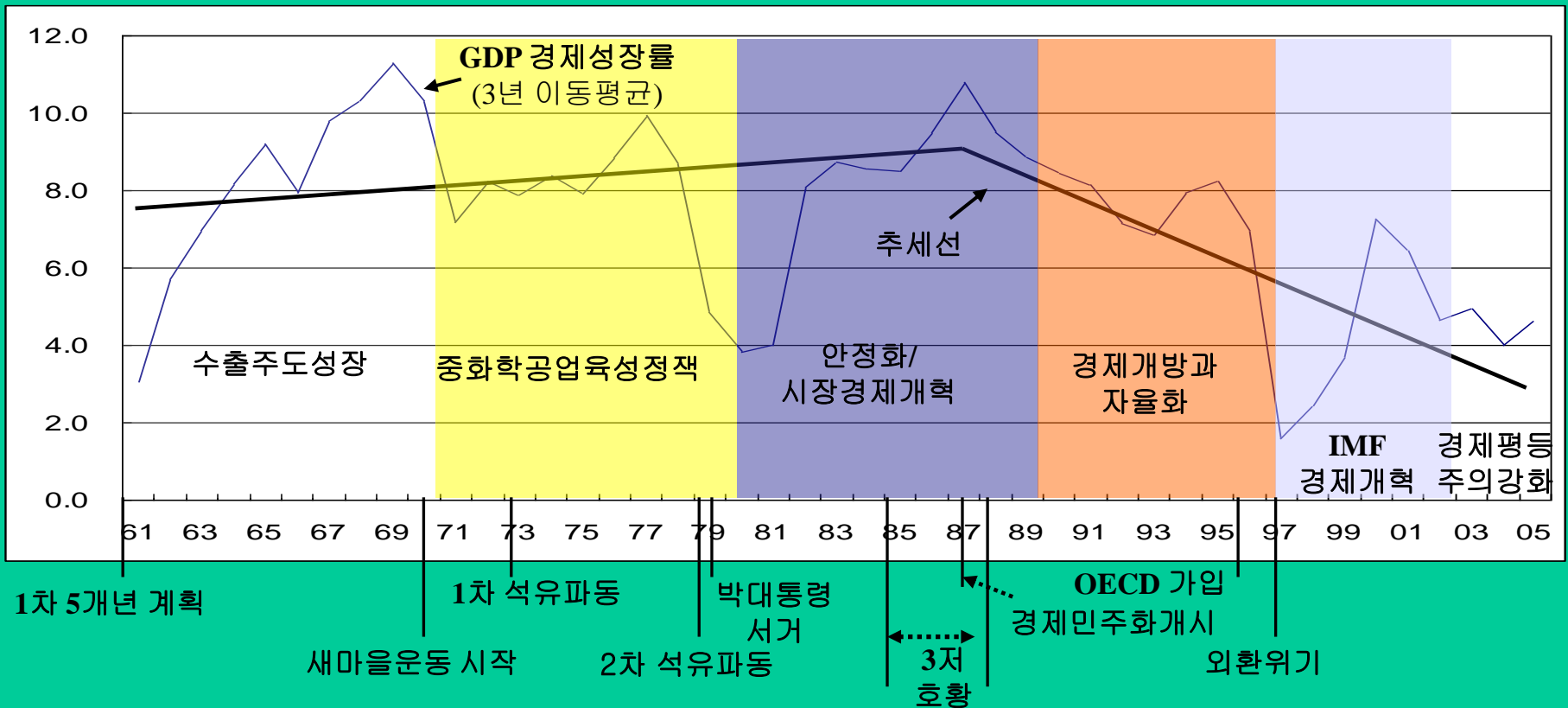


<선진국 발전경험의 교훈>

- 발전과 정체, Random process 아니다.
- 성장정체의 배경:평등주의 정책/사회민주주의 / 포퓰리즘
 - 균형발전, 경제 민주화, 큰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고율의 누진세와 부유세, 과잉복지, 분배균형, 강한 노조,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 등등 → 경제력집중과 집적해체
- 성장추세전환/역동적 성장: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성공 친화적 차별화 정책, 불균형과 차등의 용인, 작은 정부 큰시장, 자율화와 규제 개혁, 감세, 자기책임중시복지, 합리적 노조활동, 도시성장중심정책 → 경제력의 집중과 집적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1)

□ 한국경제는 60년대이후 30여 년의 연 평균 8% 넘는 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룬 후 민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장추세의 지속하락 경험하고 있다.



주: 차우 검증(Chow test)을 통해 1987년이 추세전환점(break year)임을 확인.

1961-1987년간 추세선의 기울기=0.033(0.636), 1987-2005 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 0.32(4.3513). ()내는 t-값.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2)

1. 개발연대에는 성공하는 자를 우대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즉 국민성공시대 실현:기업과 지역에서의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 1960년대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에 이룬 연평균 8% 이상의 초고속 성장은 세계 경제발전사에 지울 수 없는 금자탑.
 - 이는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는 차등과 차별화를 통해 혁신가들을 양산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고, 게으른 마을을 부지런한 마을로 바꿔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바꿔내고, 실패하던 사람들을 성공의 대열에 참여 시키는 과정이었음.
 - 이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중소기업들이 우거진 숲에 재벌 대기업들이 자라나고, 낙후지역을 밀어내며 앞서가는 지역에 경제활동의 거점화와 집적이 생겨나는, 소위 부와 경제력의 집중과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을 만들어 내는 과정.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3)

□ 정책사례

- 수출 우수 업체만 지원한 수출진흥정책
 - 성과 우수 새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 육성정책
 - 수출우수 중소기업만 지원한 중기육성정책
- 성공하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국민성공시대 실현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4)

2.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국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제력 집중과 집적의 해체노력이 외환위기와 오늘날의 경제어려움을 가져왔다

□ 80년대 중반과 후반 이후 한국경제 개혁의 화두는 무엇이었는가?

- 바로 개발시대 성공의 밑바탕이었던 경제력의 집중과 불균형을 청산하는 일.
- 경제력의 분산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정책 목표였음.

□ 집중과 집적의 해체/경제민주화와 균형발전은 민주화세력과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합작품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5)

□ 정책사례: 평등주의 함정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 받는 중기육성정책
-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 받는 대기업 규제정책
- 가난하기 때문에 더 대접 받는 농업 지원정책
-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온 경영 민주화 정책
-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 받고 지방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지원 받는 균형발전정책,
-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제도,
- 우수한 학생을 역차별 하는 교육평준화제도.

□ 혁신하고 흥하는 자를 역차별 하는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정책들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빼앗아 감으로써 경제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6)

□ 외환위기, 어떻게 설명할까?

- 평등주의체제 속에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한국 기업과 국민들의 생존능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졌음
- OECD 가입을 위한 급격한 금융의 대외개방,
- 높은 임금상승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정시키고 OECD가입 조건인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원화 고 평가 정책
- 이 결과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국내 차입이 규제된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해외차입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 1997년 들어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는데도 원화가치를 마지막 순간까지 방어하려 한 정부의 외환정책실패 → 외환보유액의 고갈을 초래.

→ 외환 위기는 80년대 중 후반 이후 지속된 발전 역행적인 평등주의 정책과 정부환율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 품.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7)

□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 잘못된 원인 진단: 외환위기는 민주화이후 지속된 **경제력집중의 청산을 위한 개혁의 미흡, 경제민주화(평등주의)개혁의 미흡**에서 연유한다고 진단.
- 잘못된 처방: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개혁의 화두였던 **경제력 집중을 청산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

□ 외환위기이후, 무엇을 했나?

-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규제를 강화하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방식과 지주회사제도를 획일적으로 채택하도록 강요.
- 대기업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소위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했으나 실상은 여전히 규모가 작아야만 지원받는 발전 역행적 구조를 못 벗어남.
- 외환위기 이전 15년 여를 지배해온 평등주의 함정은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

VIII. 한국경제의 현주소(8)

- 노무현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합정을 더더욱 심화 시켰음.
- 강남청산, 부자청산, 서울대 폐지라는 레토릭은 물론 실제로 행복도시 건설 등 지방 우대정책과 수도권규제의 강화, 부유세의 도입 등, 그 동안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흥하는 자를 억 차별하는 발전 역행적인 정책들을 더 양산.
- 외환위기는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게 하는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을 온존시키거나 심화 시키는 ‘진정한 저주’가 되었음.

IX.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전략(1)

1. 모든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 중소기업, 농민, 근로자, 지방, 지방대학, 낙후지역 혹은 약자라야 대접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정의”란 실패한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 전략: 홀로 서서 성공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

IX.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전략(2)

2. 경제력집중을 두려워하고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발전은 모두 나아지지만 결코 같아지지 않는 과정이다.
- 부자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서울대학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학이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도 강남이 여럿 생기게 하는 것이 발전을 일으키는 길
- 흥하는 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IX.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전략(3)

3. 특히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양산되는 과정이 경제발전의 과정이다.
-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각종 경제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 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보다 비 민주적이고 그 내부거래는 불투명하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면도 있다. → 기업개혁이 기업본질을 훼손하게 되면 발전은 어려워진다.

IX.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전략(4)

4.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한다.

- 시너지 창출원인 흥하는 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자들을 양산함으로써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일류를 일류로 대접함으로써만 더 많은 일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하는 것이다.
- 듀바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역동적인 경제: 세계 일류기업, 개인들이 몰려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미국경제: 세계 500대기업의 35%이상과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세계 최고 일류들의 집산지

X. 국민성공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국민성공시대의 대전제

1. 성공과 실패는 국민개개인의 몫이며 책임이다.
2. 국민 모두가 성공할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같아질 수 없다.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 그리고 부문들이 다 향상해 나갈 수는 있으나 결코 같아 질 수는 없다.
3. 747공약은 모든 국민이 10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평균 매년 7%이상의 성공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하는 국민들이 그 만큼 많아 지지 않고 발전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 성공하는 국민을 우대하라!!!! 그래야 모든 국민들을 성공의 길로 유도할 수 있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

1. 헌법이 바로서야 발전 친화적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헌법은 최상위 공식적 제도이다.
 - 우리헌법은 균형발전,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해체, 소득재분배라는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헌법 119조 2항).
 - 또한 중소기업, 농민 등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이 발전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보다 명확히 천명되는 것이 좋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2-1)

2.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획일적 지방육성정책 탈피해야 균형발전 가능하다.

□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과 동시에 지방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여 각 지방이 중앙정부지원을 $1/N$ 로 나누는 ZERO-SUM게임에서 탈피하여 발전의 원천을 해외에서 찾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 지방간 발전의 차등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전국에 특성, 기업도시를 안배하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평등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 서울 강남이 영남에도, 호남에도 하나씩 생기도록 거점화 전략을 써야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2-2)

-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대기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없이 747공약 달성을 위한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3)

3. 평준화교육 탈피와 대학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해야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 평준화교육은 수월성교육과 학생과 학교간 차등을 포기함으로써 공교육의 실패를 초래하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제도이다.”
- 전국 201개 4년 제 대학이 다 같이 발전할 수는 없다. 앞서가는 대학이 세계일류대가 되고 그와 같은 대학이 더 많이 생기는 과정이 대학발전과정이다.
- 지방 대학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 된다./당장⁵³ 로 스쿨 균형배분 정책부터 철폐해야 한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4)

4. 부자를 역차별 하지 마라. 선진국은 부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산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 누진세제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어야 한다.
- 탈법과 탈세를 하지 않은 모든 부는 다 청부(淸富)이다. 세상에 쉽게 버는 부와 어렵게 버는 부가 따로 있지 않으며 그래서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없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5)

5. 복지정책은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난이 국가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가난이 특권이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가난하지만 노력하고 그래서 남보다 발전하는 국민을 더 우대해야 한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고쳐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복지정책을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회정책에서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서구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6-1)

6. 대기업을 역차별 하지 마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없이 발전도 없다.

❑ 선진국은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를 의미한다.

❑ 대기업의 투자활동, 경영행태, 기업구조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기업 역동성에 독이 된다. → 총액출자규제, 상호출자규제 등 획일적 경영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계열사수가 무슨 도덕성이나 경영건전성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 기업내부거래가 시장처럼 투명할 수 없음이 기업의 본질이다. 투명경영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기업지배구조(사회이사제도나 내부통제제도)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좋지 않다.

❑ 성공경영의 정답은 없다. 단지 진화할 뿐이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6-2)

□ 독점기업은 어떡하나?

- 자생력으로 일군 독점은 해가 없다. 보다 많은 경쟁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정부의 진입규제를 통해 형성, 유지되는 독점은 해가 많다. 진입규제를 풀어 경쟁에 노출 시켜야 한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7)

7. 경영민주화 개혁은 기업의 본질에 역행한다.
기업은 수직적 명령 조직이며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은 노조와 경영자가 동등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민주화 개혁이다. 그러나 복수의 CEO를 허용하는 이 개혁은 기업의 본질에 역행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 해가 된다.
 -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실패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8)

8.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으며, 특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되며 오직 잘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접 받도록 해야 한다.

- 중소기업 육성제도를 완전 개편하여 사회정책에서 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는 대기업의 경제력 확대를 막는 총액출자규제 등 계열사에 대한 각종규제는 오히려 중소하청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9)

9. 금융산업의 대형화 시급하다. 국내외 자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 ❑ 정부의 금융개입 아직도 과도하다.
- ❑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 산업자본이나 심지어 금융자본 보다 더 부도덕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 ❑ 산업자본의 상업은행 소유에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나 비은행 금융산업에의 진출을 막을 논리는 약하다.
 - 4% 허용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지분권행사를 인정하고 허용지분을 더 올려도 좋을 것이다.
- ❑ 성공하는 금융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형금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0)

10. 농업을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농민을 농토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 농지거래규제(비농민의 300평이상 소유금지)와 농지이용규제(농업진흥지역규제)를 풀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재촌탈농을 가능하게 해주고, 농업부문에 진입을 자유화하여, 농업은 능력 있는 자본에 맡겨야 한다.
- 농촌을 농업현장에서 생활현장으로 바꿔야 한다.
- 농어촌주택에 대한 일가구이주택규제예외인정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1)

11.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
라서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
라면, 주식투자도 돈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이
다.

- 부동산투자와 소유에 대한 세금폭탄과 건설
업에 대한 과잉규제는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 아파트 건설원가(supply price)를 낮춰줄 수
있는 용지공급의 확대나 주택공급경쟁의 촉
진을 위한 규제완화 없이 싼 주택을 공급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없다.
- 아파트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경제논리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2)

12.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복잡계 경제는 완전하게 통합된 네트워크 경제이다. 제조 대기업부문이 정체되고 있는데 서비스업만 잘될 수는 없으며,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기는 어렵다.
-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약하는 정규직 전환정책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는 내가 낸 세금에서 내 봉급을 받아 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 살 깎기’에 다름 아니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3)

13. 미래, 첨단산업이라는 유망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성공해야만 우리나라 산업이 될 수 있다.

□ 유망하다고 정부나 중소기업이나 아무 대기업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강한 대기업들이 참여해도 다 성공하지 못한다. 단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에 차별화원리를 적용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4)

14. 거시경제의 안정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

- 거시경제는 미시경제의 발현(emergent pattern)이다
- 국민들을 열심히 경제생활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국민경제의 유인구조를 만들어 냄이 없이 단지 금융재정정책이나 건설업부양조치등과 같은 단기부양정책만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성장추세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인플레이우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의 역량강화 시급하다. 국민경제운영에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 물가는 국민경제운영의 총체적 결과이다. 금리만으로 인플레이를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다.

XI.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15)

15. 정부가 좋아하는 자의 편이 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 평등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늘어나고 실패는 양산되고 발전은 정체된다.

□ 앞서가는 사람들을 역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도움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야 한다.

□ 중소기업, 농민, 취약계층 등 음지의 국민들을 돕는다는 것이 음지에서 안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지로 나오도록 돕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성공 친화적인 법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정치적으로 쓴 약이지만 성공하는 자를 우대하는 길 외에 국민성공시대를 열 방법은 없어 보인다.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1)

-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민주주의 실험이 시작된 이후 대체로 30여년 세월이 흘러야 거의 영%성장에 이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개혁의 요구가 나옴.
-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은 보다 강도 높게, “흥하는 일류 국민을 폄하하고 취약 계층만을 우대하면 온 국민이 평등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민주주의적 포퓰리즘속에서 발전의 원천인 집중과 집적의 분산과 해체를 추진.
- 우리 경제는 수년 내 성장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의 성장추세선을 연장해보면, 지금의 3-4% 성장잠재력은 10년 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음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2)

- 우리는 새로운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필자의 답은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의 4%대의 성장은 발전역행적인 이념의 실험을 지탱해 줄만한, 그래서 견딜만한 수준인지도 모른다.
 - 그래서 이상과 같은 새 정부의 개혁은 아마도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소지가 커 보인다.
- 그럼 앞으로 1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추세선을 반전시키는 데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고 성장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과실은 아마도 5년이나 1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래서 새 정부는 대단히 어려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셈이다.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3)

-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기대
- 지난 5년의 경험: 일류로서의 역할모델
미흡

“성공하셨다고요? 그놈의 잘난 기득권 때문이겠죠. 이제 기득권 없이 살아 보시지요.”라는 투의 말과 정책으로 땀 흘려 성공한 일류를 끝없이 폄하하고, “어렵죠, 그냥 계시면 제가 돕겠습니다”라는 취약계층을 도운다는 말과 정책으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에 몰두하여, 경제의 역동성하락을 조장하였다

.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4)

- 향후 5년에 대한 기대: 일류로서의 역할 모델 기대
- “국민여러분, 어렵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일어서고자 하지 않으면 국가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시골 상업학교 야간 고학생에서 자력으로 대통령까지 된 성공모델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메시지로, 그리고 앞서가는 성공하는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개인의 성공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메시지로, 선거 중에 내놓은 장밋빛 미사여구의 선심공약들을 다 털어내고, 모든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 발전과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XII. 몇 가지 마지막 생각(5)

-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일으키고 싶다면 이 정신이 중요하다 교육하고 설파하는 것 보다, 바로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우대해야 한다”